

##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와 시사점

강영숙 | 선진경제부장 (3705-6209)

- [이슈]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은 방위비의 큰 폭 증액, 무기수출 제한 완화 등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
  - 다카이치 내각은 위기관리 및 성장투자를 위한 17개 전략 분야의 하나로 방위 산업을 선정. 내년도 예산 요구액, 새로운 안보 3문서 등에서도 방위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될 전망
- [전략적 동기] ①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억제 ②자체 방위력 강화 ③국내 방위산업 육성 ④국제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러우 전쟁으로 탈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유사한 사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인식이 증가. 특히 중국이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 경계감이 고조
  - 자체 방위력 강화: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늘어나고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사시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이른바 계전(繼戰) 능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
  - 국내 방위산업 육성: 수출 시장이 개방되면 수익성 개선 등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위비의 해외 유출(엔재)도 억제 가능
  - 국제 경제 안보 협력 확대: 일본은 인재 부족, 취약한 공급망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방위장비 이전, 공동 개발·생산 등을 매개로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
- [시사점] 글로벌 전반적으로 방위 능력 강화, 경제 안보, 성장 전략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강화. 방위 산업에의 영향과 네트워크형 안보 체제로의 변화에 주목
  - 협상력 강화,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등은 수출 확대보다 개발·생산에서 정비·보급 기술 협력에 이르는 일련의 관계를 통해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 [이슈]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은 방위비의 큰 폭 증액,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등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

- 일본은 1976년 ‘무기 수출 3원칙’이 발표된 이후 무기 수출이 전면 금지되다시피 했으나 2014년 아베 내각을 기점으로 방향이 전환<표 1>
  - 2014년에 발표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산 수출을 평화와 국제 협력 증진, 일본의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하고 비살상 5개 유형(구조, 수송, 경고, 감시, 기뢰 제거)은 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
  - 상황을 급진전시킨 것은 2022년의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방위력 정비 및 방위비 증액 목표가 제시
- 최근의 수출 제한 완화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대개정으로 ETTA 체결국이고 분쟁중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장비의 해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수정<표 1>
  - 미국은 분쟁 당사자국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다카이치 내각은 위기 관리 및 성장 투자를 위한 17개 전략 분야의 하나로 방위 산업을 선정. 추후 발표될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내년도 예산 요구액, 새로운 안보 3문서 등에서도 방위 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될 전망

<표 1> 최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 재검토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2022~2023년	
국제 공동 개발 및 생산	파트너 국가로부터 제3국 이전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운용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파트너 국가가 완제품을 이전한 제3국에 대해 부품 및 기술의 직접 이전을 허용
라이선스 생산품 제공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공동 개발한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 차세대 전투기 수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라이선스 제품(완제품 포함)도 라이선스 제공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국(라이선스 원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따라 허가된 국가)에 제공 가능.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 하는 제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제공 불가
부품 이전	안보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5개 유형	5개 유형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해당 과정에서의 자기 방어를 위한 자위대법 상 무기 탑재는 협력 범위 내에서 이전 가능
2026.4.21일	
5개 유형 철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도 수출 가능. 협정 체결국이 대상으로 분쟁중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출 가능 (GCAP 관련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는 제공 불가)
수출 심의	무기 수출은 국가안보회의(NSC) 장관회의, 비무기 수출은 간사회에서 심사.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국회에 통지(주요국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는 확인 불가) 심사 항목을 확충하고 현에서의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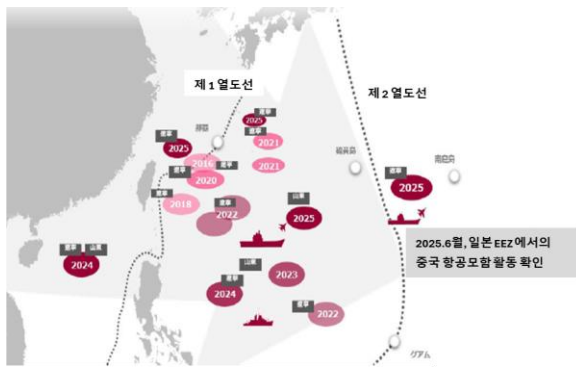
주: 일본의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ETTA)’ 체결국은 2026.4월 기준 17개국(미국,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스웨덴, 싱가포르, UAE, 몽골, 방글라데시). 캐나다와는 2026.1월에 ETTA를 체결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

자료: 내각부,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 [전략적 동기] ①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억제 ②자체 방위력 강화 ③국내 방위산업 육성 ④국제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러우 전쟁으로 탈냉전 시대가 종료, 유사한 사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인식이 증가. 특히 중국이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 경계감이 고조<그림 1>
  - 중국은 핵 미사일과 해상·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 중국은 2026년 국방 예산도 7% 증액하여 국방을 우선시하는 모습<그림 2>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최우선 순위로 제시
  -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얽혀 있으며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물류상 중요한 길목에 있는 대만 해협이 유사(有事)는 일본의 유사로 간주될 수 있는 요인. 대만 해협 봉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상의 영향이 나올 우려
  - 일본 정부는 방위 백서에서 중국이 제 1열도선을 넘어 제 2열도선을 포함한 해역 너머에서의 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

<그림 1> 중국 항공모함 활동



자료: 방위성

<그림 2> 중국, 일본의 국방비 추이



주: 방위관련비는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 미군 재편성 관련 비용

자료: 방위성

- 자체 방위력 강화: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늘어나고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사시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이른바 계전(繼戰) 능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
  -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대만 유사 가능성이나 미국의 지원 능력과 의사 모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진 단계

- 일본은 미국에 무기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이전을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 방위비 증액 등도 압박해 오며 따라 당초 2027년으로 하고 있던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 달성을 2년 앞당기도록 조치
    - \* 방위력 강화 대책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합쳐 11조엔 정도
  - 트럼프 행정부는 2026.2월 ①자국 방위력에 투자 ②미국의 계획 및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지리적 위치를 차지 ③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 이전을 우선시하겠다는 행정 명령<sup>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sup>에 서명
  - 5.25일 자민당 안보조사회의 안보 3문서 개정 관련 제언에서는 NATO, 한국, 호주의 국방 예산이 언급. 향후 일본의 국방 예산 논의에서는 GDP의 3.5%가 핵심 참고 수치가 될 전망
- **국내 방위산업 육성:** 수출 시장이 개방되면 수익성 개선 등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위비의 해외 유출(엔저)도 억제 가능
-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비가 GDP의 1% 미만으로 억제되고 수출도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철수, 국내 공급 기반이 약화. 그 결과 방위비 지출 확대와 더불어 무기 수입이 급증<표 2, 3>
  - '24년 기준 글로벌 방산 기업 100위권 안에 드는 일본 기업들은 총 매출에서 무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1%로 전체 평균(54%)을 크게 하회(SIPRI)
  - 안보 관련 3문서에 근거한 장비 확충과 엔저 가속으로 2021~2025년 일본의 무기 수입액은 2016~2020년 11위에서 6위로 상승
  - 수출 제한 완화는 기업들에 사업 기회를 늘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시키며 자동차 산업 등의 과잉생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표 2> '21-'25년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

		글로벌 수출 비중(%)		변화율(%)	주요 수입국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1-'25	'16-'20		1위	2위	3위			
1	미국	42	36	27	사우디	12	우크라이나	9.4	일본	8.9
2	프랑스	9.8	8.8	21	인도	24	이집트	11	그리스	10
3	러시아	6.8	21	-64	인도	48	중국	13	벨라루스	13
4	독일	5.7	5.4	15	우크라이나	24	이집트	14	이스라엘	10
5	중국	5.6	5.5	11	파키스탄	61	세르비아	6.8	태국	4.7
6	이탈리아	5.1	2.2	157	카타르	26	쿠웨이트	17	인도네시아	12
7	이스라엘	4.4	3.1	56	인도	29	독일	21	미국	7.8
8	영국	3.4	3.3	13	카타르	31	미국	14	우크라이나	13
9	한국	3.0	2.6	24	폴란드	58	필리핀	18	UAE	9.5
10	스페인	2.3	2.4	6.7	사우디	28	터키	16	벨기에	12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표 3〉 '21-'25년 주요 무기 수입국 순위

		글로벌 수입 비중(%)		변화율(%)	주요 공급국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1-'25	'16-'20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	우크라이나	9.7	0.1	11896%	미국	41	독일	14	폴란드	9.4
2	인도	8.2	9.3	-4%	러시아	40	프랑스	29	이스라엘	15
3	사우디	6.8	11	-31%	미국	77	스페인	9.5	프랑스	4.6
4	카타르	6.4	3.4	106%	미국	48	이탈리아	21	영국	17
5	파키스탄	4.2	2.8	66%	중국	80	튀르키예	7	네덜란드	4.6
6	<b>일본</b>	<b>3.9</b>	<b>2.5</b>	<b>76%</b>	<b>미국</b>	<b>95</b>	<b>영국</b>	<b>3.4</b>	<b>노르웨이</b>	<b>0.9</b>
7	폴란드	3.6	0.4	852%	한국	47	미국	44	이탈리아	2.2
8	미국	2.9	2.1	48%	영국	17	프랑스	14	이탈리아	13
9	쿠웨이트	2.8	0.3	805%	미국	62	이탈리아	31	프랑스	5.7
10	호주	2.8	5.0	-39%	미국	85	스페인	6.2	독일	4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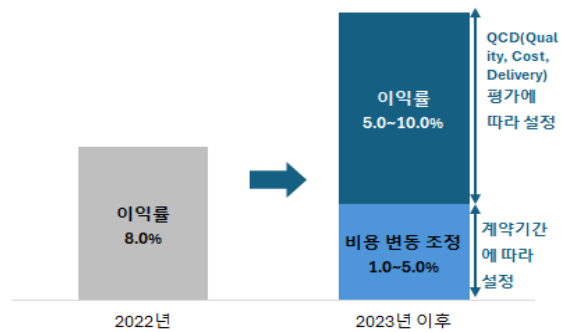
- **국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일본은 인재 부족, 취약한 공급망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방위장비 이전, 공동 개발·생산 등을 매개로 하는 다자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 IMF에 따르면 글로벌 방위 지출 증가의 2/3는 재정적자 확대에 충당되는 경향. 공동 개발·생산 등 협력은 리스크와 재정 부담을 억제하면서 필요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옵션
  -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을 보완하는 틀로 여타 주요국,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필리핀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에 에너지 안보, 공급망 강화를 위한 \$100억 지원 계획을 발표
    -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공동 개발 및 생산, 안보능력강화지원(OSA), 합동 훈련 등은 파트너 국가들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장비의 상호 운용성 향상, 유지·정비 기반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 [시사점] 글로벌 전반에서 방위력 강화, 경제 안보, 성장 전략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강화. 방위 산업에의 영향과 네트워크형 안보 체제로의 변화에 주목

- 일본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동맹 프레임워크 쿼드의 핵심 국가로 일본산 방위 장비 도입은 이들 국가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의미. 일본산 방위 장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 일본 방산 업계는 정부의 방위 지출 확대, 수익성 제고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6p 그림 3, 4>. 3.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내 SM3 블록 IIA 미사일 생산을 즉시 4배로 늘리는 것 등이 논의된 것은 일본 방산업계에 희소식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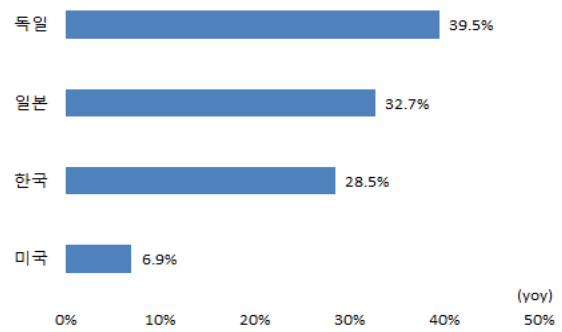
- 협상력 강화,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등은 수출 확대보다 개발·생산에서 정비·보급, 기술 협력 등에 이르는 일련의 관계를 통해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 안보만으로는 동맹이 지속되기 어렵고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고 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움직임도 지속될 전망
- 한국도 글로벌 방위력 강화 기조, 동아시아 긴장 고조,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염두에 두고 방위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화해 나갈 필요

〈그림 3〉 일본 방산 이익률 산정 변화



자료: 일본 방위장비청

〈그림 4〉 2024년 무기 매출 증가율



자료: SIPRI 집계 상위 100개 기업 기준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09 혹은 yska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